

청년 농부 ‘빚’으로 출발…전남 후계농 대출액 1억7000만원

전남 농가 평균 부채의 4.5배 ... 농가 소득 줄고 부채는 역대 최고
대출 상환 부담에 귀농자금 마련 위축...2030 귀농인 年 200명 대

지난해 전남 평균 농가소득이 400만원 줄어든 가운데 부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부채가 심화하는 가운데 농업소득 감소와 상환 부담 탓에 청년 농부들의 귀농자금 마련 기회는 위축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대출자는 744명으로, 전년(799명)보다 6.9% 줄었다.

후계농 자금 이용자는 전남에서 2020년 310명(440억원), 2021년 368명(502억원), 2022년 396명(586억원) 등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가 꺾였다. 후계농 자금은 5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매·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올해 들어 9월 기준 전남 신규 대출자는 649명(1007억원)에 그쳤다.

광주지역 대출자도 2023년 22명, 지난해 7명, 올해 9월 4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후계농 자금 대출자가 늘어난 지역은 1년 새 66명 증가한 충남과 경남(39명 ↑), 경기(17명 ↑), 울산(10명 ↑), 세종(3명 ↑) 등 5곳이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후계농의 절반 수준인 탓에 이용이 급감했다. 귀농자금은 대출 최고액이 3억원으로, 후계농 자금(5억원)보다 적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자금 신규 대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올해 들어 9월까지 1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전남 귀농자금 대출자는 2020년 25명, 2021년 20명, 2022년 8명, 2023년 4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왔다.

청년의 농업자금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 농가는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부담, 농업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부채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농가 평균 부채는 3765만원으로 1년 새 16.7%(552만원) 급증했다. 부채 증가율은 전국 평균 8.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남 청년들의 후계농 자금 평균 대출액은 1억7000만원으로 지역 평균 부채의 4.5배에 달했다. 전남 농가소득은 지난해 4568만원으로, 1년 새 8%(395만원) 감소했다. 전남 소득 감소율은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감소율(0.5%)을 크게 웃돌았다.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지난해 625만원으로, 1년 새 40.2%(419만원) 급감했다.

한편 전남지역 귀농인은 2579명(2021년)→1987명(2022년)→1803명(2023년)→1538명(지난해) 등으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30 귀농인은 2022년 201명, 2023년 212명, 지난해 207명 등으로 200명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문금주 의원은 “올해 귀농자금 연체율은 1.58%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치솟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청년 귀농인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둘러막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귀농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상환을 2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한 대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책서 발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서 발간 시연회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책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정부 자산 매각 사례 전수 조사·감사”

YTN 지분 매각 등 포함
전·현 정부서 추진된 사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

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

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전희 “샤넬백 두차례 선물 받았다”

명품 가방 수수 첫 시인...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

김전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본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도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인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전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한 상황에서 김 여사 혐의 적용을 끊어내려면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청탁을 받고 이에 관한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서 방어해야 하는 국면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전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청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설명 청탁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 논리가 틀리더라도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까지 뻗어가지 않도록 대통령 직무나 구체적 직권(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순한 의사표시인 호의 언급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